광주 학교폭력 3년새 30% 증가 이유 뭔가

광주시교육청 시정질의

출석정지·전학·퇴학 등 가해학생 징계처분도 늘어

성폭력 피해 학생수 3년새 2배… 교직원 성비위도 급증

광주시교육청의 징계 건수는 급증하고, 광주지역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성폭력 피해 학생 수도 늘고, 이를 막아야 할 교직원의 성비위 행위도 끊이지 않는 등 시교육청의 부실한 행정이 광주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됐다.

21일 광주시의회 유정심 의원(국·남구 2)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징계 건수는 2014년 33건에서 2015년 41건, 2016년 80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 현재 징계 건수는 43건이다.

징계 유형별로 가장 많은 분야는 음주운전으로 2014년 14건, 2015년 11건, 2016년 43건, 2017년 21건이다.

광주시교육청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순위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2015년 3위까지 올라갔으나 2016년 16위로 최하위까지 떨어졌다.

교육청이 청렴도가 떨어지는 동안 아이들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유 의원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건수는 2013년 639건에서 2014년 664건, 2015년 694건, 2016년 834건으로 3년 만에 195건(30.5%)이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2013년 389건에서 2016년 542건으로 153건(39.3%)이 늘었다.

학교폭력 중 수위가 높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도 증가하고 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수는 2013년 185명에서 2014년 168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5년 208명으로 급증했다가 2016년 196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학교 성폭력 피해 학생 수 역시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모두 234명의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발생했고, 피해 학생의 70%가량이 중학교에 집중됐다.

이날 주경님(민·서구4)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광주시 초중고 성폭력 사안 관련 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 성폭력 관련 자치위 심의건수·가해 학생 수·피해 학생 수가 모두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학교 성폭력 관련 자치위 심의건수는 2014년 51건, 2015년 78건, 2016년 102건으로 2배 늘었다. 가해 학생 수도 2014년 81명에서 2016년 107명으로 증가했으며, 피해 학생 수는 2014년 103명, 2015년 135명, 2016년 234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피해 학생의 경우 2014년에는 초등학교 53명,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20명이었지만, 2015년 이후 중학교 피해 학생 수가 크게 늘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5년 피해 학생은 중학교가 8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36명, 고등학교 13명 등이다. 이어 2016년에는 중학교 161명, 초등학교 51명, 고등학교 18명 등으로 중학교 피해 학생 수 비율이 68%까지 치솟았다.

교직원들에 대한 성비위 징계도 2014년 3명에서 2015년 6명, 2016년 7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일선 학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미세먼지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정현(국·광산1) 의원은 21일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일선 학교도 미세먼지로 범벅되고 있는데 시교육청의 관련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벌백계하고 부패 관행 문화는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광록기자 kroh@

희망나눔센터 사랑의 송편빚기 21일 광주시 북구 임동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광주지역 취약계층 500여 가구에 전달할 송편을 빚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출연기관 잇단 구설… 도지사 공백 '기강해이'?

테크노파크 태양광 특혜 의혹

설계공모 보건연구원 압수수색

전남도 일부 산하기관이 시끄럽다. 도지사 공백사태가 부른 '기강 해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테크노파크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과 관련해 이날 해당 사업 추진 단장을 직위 해제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부터 재단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나왔다.

전남테크노파크는 목포 세라믹산단, 영암 대불산단 등 전남 7곳의 건물 옥상, 유휴 부지를 제공하고 업체로부터 발전량에 따라 MW당 2000만원의 임대료를 20년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 허가 신청서에 법인 인감이 아닌 원장의 도장이 날인됐고, 입찰 당시 공고에는 발전 용량을 2MW로 명시하고도 4MW를 제안한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발전량이 증가하면 업체로서는 그만큼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앞서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전남테크노파크의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입찰 과정에 여러 의혹이 있다"며 문제 제기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다. 아직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분원 설계 공모 과정에서 일어난 특혜 의혹과 관련, 지난 11일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분원 건립을 위해 설계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사전 결탁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모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입찰 방해 혐의로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잇따라 터진 산하기관의 잡음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맴돌다가 급기야 지난해에는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전남도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도지사 공백사태가 부른 기강 해이가 주요 원인"이라며 "본청도 영(領)이 서지 않는데 산하기관이라고 통하겠는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기강 해이가 장기화되지 않을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인권옴부즈맨실 인력 부실 운영

평화협력관실 지원관·주무관 공석… 잦은 교체도 문제

시민인권 보장 및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광주시 옴부즈맨실의 인력 축소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하지만 지원관은 장기연수로 두 달째 자리를 비우고 있고, 주무관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지원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6명이나 바뀌었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1년6개월이 가장 길고 올해는 석 달에 한 번씩 바뀌면서 '3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전락했다. 주무관도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비상임 옴부즈맨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매월 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인권회의 측은 주장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치과용소재부품지원센터 전국 최초 개소

북구 테크노파크 2단지에

광주지역 치과산업을 이끌어 갈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21일 "북구 테크노파크 2단지에 치과용 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가 준공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는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거점사업으로 선정돼 부지 5875㎡, 연면적 6313㎡(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250억원이 투입, 지난 6월 준공됐다.

센터는 ▲표면처리·부품가공·시험평가 장비실 ▲공용장비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실 ▲사무실·회의실 등으로 설계됐으며, 지역 치과기업과 함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업 유치를 통해 (주)디멕스 등 18개 업체가 입주를 마치는 등 100% 입주, 광주시는 치과산업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소식에 앞서 서울 등 수도권 30여 개 기업 대표를 초청해 지역 치과의료산업 성장과 전망 등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었다. / 오광록기자 kroh@

"광주형 일자리 배우자" 벤치마킹 잇따라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이를 배우려는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대전시청은 최근 광주를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제, 광주형 일자리 이론 등을 집중 탐구하고 갔다"고 밝혔다.

앞서 김천시청은 경총과 한국노총 간부 등이 포함된 8명으로 일자리 연구단을 꾸려 광주를 방문했다. 김천시가 추진 중인 자동차 튜닝 기술지원 클러스터 사업에 광주형 일자리 접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의했다.

창원시청 견문단 51명도 21일 버스 두 대로 나눠 타고 1박 2일 코스로 방문했다. 견문단은 숙소인 신양파크호텔에서 22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상황을 설명 듣고 오후에 DJ센터에서 개최되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토론회'에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 / 오광록기자 kroh@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에 황재연씨 내정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에 황재연 전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이 내정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4명의 응모자 중 황 단장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황 후보자는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사장인 전남지사(권한대행)가 임명하게 된다.

진흥원은 지난 7월 원장 공모했지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적임자가 없다며 추천을 유보, 재공모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